

서평

사회과학은 사건을 어떻게 사유하는가

김종엽 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2016)

최진석 _이화여자대학교, 수유너머N

1. 세월호와 사회과학의 과제

2014년 봄, 세월호의 비극이 빚어낸 슬픔과 분노로 전국이 들끓어올랐던 일을 누구든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은 연일 광장에 모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고 사회적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와 진실이 구현되길 바라는 것은 무망(無望)한 노릇이어도, 적어도 그에 대한 요구에 일정한 반향이 있기를 바라는 심정은 모두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고장 난 라디오 마냥 무의미한 동어반복을 거듭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실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마치 진도 앞바다에 배가 가라앉을 때 ‘골든타임’을 허비하여 최후의 기회를 유실시켜버렸듯, 그렇게 진실을 알릴 시간은 서서

히 소모되어갔다. 불분명한 이유로 거대 선박이 침몰하고 아이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교통사고’에 비유하는가 하면, 애꿎게 목숨을 잃은 학생들에게 ‘가난한 집 애들이 기차타고 불국사나 가지 왜 배를 탔냐는 망언이 나왔을 때 비로소 분명해졌다. 우리에게겐 정의나 진실의 요구에 답할 만한 책임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4월 16일이 우리에게 알려준 쓰디쓴 진실은, 사회의 공식적 담론의 바탕에 놓여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가족과 민중의 행진, 그들의 절규와 성난 외침이 공전(空轉)하던 그해 여름은 어쩌면 우리에게 닥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과정이었을지 모른다. 그 때문에 그 여름이 지나고 우리 스스로 사태를 냉철한 시각에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월호와 한국사회에 대해 묻고 답했다. 가령 문학인들은 시와 소설을 통해, 대중과 함께 하는 낭독회를 통해 세월호가 던진 물음에 답하려 노력했다. 소설가 박민규의 동명의 글을 제목으로 삼은 『눈먼 자들의 국가』(문학동네, 2014)나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채록해 작가기록단이 집필한 『금요일엔 돌아오렴』(창비, 2015), 『다시 봄이 올 거예요』(창비, 2016)가 그랬고, 단원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시혼(詩魂)에 담은 『엄마. 나야.』(난다, 2015)도 그랬다. 또한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현실문화, 2015)은 인문학적 시선에서 세월호와 한국사회의 현재를 조망한 깊이 있는 시론이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성찰적 시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앞에는 사

회과학의 관점에서 세월호라는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책,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그린비, 2016)이 주어져 있다.

이 책은 단지 현대사의 커다란 변전을 설명하거나 논쟁하는 또 한 권의 책이 아니다. 비록 ‘사회과학’을 표제에 내걸고 있으나 그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다. 알다시피, 근대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과학은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이상(理想)으로 삼아 발전해왔다. 이른바 ‘과학’을 표방한 사회과학적 연구 및 방법론은 세상사에 개입하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고 분석하며 서술하는 태도로 일관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사태에 대한 판단보다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 치중해왔다. 각종 통계적 수치를 들이대며 유사성과 차이를 드러내거나, 그 누구의 입장도 편들지 않은 채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론적 태도에는 언제나 주관적이고 당파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대 사회과학의 과제는 객관성과 가치중립을 빌미로 상아탑의 지적 유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모순과 곤혹에 깊이 침투하여 그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이 “참사를 야기한 사회적 병폐를 키우는 데 일조해왔던 과편화된 분과 학문의 모든 지적 관행과 단절”하고, “가치중립적 사회과학이라는 불가능한 이상에 기대어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을 외면하는 지적 병폐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7쪽)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단지 수사적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월호라는 전무후무한 한국사의 한 사건적 장면으로부터 사회과학이 어떻게 변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함축하고 있다. 그 역

동적인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2. 고통과 트라우마를 넘어선 사회적 연대

이 책의 첫 번째 주제를 이루는 '세월호의 사회적 고통'은 네 명의 필진이 참여하여 사회과학이 바라본 비극과 고통의 개념을 탐사한다. 여기서 핵심은 고통의 사회적 전치(轉置)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희생과 슬픔이 안고 있는 실존적 무게를 사고-보상의 프레임이 포획했을 때 일어나는 사물화된 이미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개입의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 1부의 주안점이다.

「이해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를 작성한 김종엽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이 우리의 일상적 인식을 전복시키고 기존의 사회적 관심사를 달리 보도록 촉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건'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마주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 전반, 즉 사회와 국가,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적 통찰을 강제당하는데, 그로써 현실을 이전과는 낫설게 바라볼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사건은 이렇게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낳고, 이러한 의미 생성의 과정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건전하게 변형시킬 잠재성을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의미 생성이 언제나 실효적이진 않다. 이데올로기는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에 개입하여 선별과 배제의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사건을 '사고'로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킨다.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정보는 적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혼돈된 인식과 오류는 정보의 양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짐짓 모두가 똑같은 비중을 지닌 것처럼 제시되었기에 무엇이 더 근본적인지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이 진짜 문제였다. 마치 도심에서 벌어진 집회와 주변 상권의 경제적 손실이 등가화됨으로써 생겨나는 ‘물타기’ 책략이 여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을 사건으로서 올바르게 비추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책략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을 다질 필요가 있다.

「교통의 의료화와 치유의 문법」에서 김명희가 제안하는 것은 ‘사고-보상 프레임’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과 비판적 도전이다. 국가의 관리 소홀과 태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에, 그에 대한 배상 요구는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왜곡된 논리와 조작 시도, 정교한 은폐를 동원한 국가는 사건을 ‘사고’로 전환시키고, 배상을 ‘보상’으로 둔갑시키려 든다. 주지하다시피, 배상이 보상으로 전환되는 순간 수백 명의 억울한 희생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천재지변과 같은 불운의 문제처럼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침몰은 그저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니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희생에 대한 물질적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에 접근할 경우, 우리는 자칫 사고-보상의 프레임에 함몰될 수도 있다. 정부와 언론의 정보조작이나 여론호도에 좀 더 민감하고 예리한 분석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같은 논지에서 세월호가 남긴 정신적 상처, 흔히 ‘트라우마’라 불리는 증상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반성과 고찰이 요구된다.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식의 의료용어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의료적 치유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세월호 참사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생명 구조 실패라는 불가해한 사건의 사회적 과정과 무책임의 시간대에 편입된 전 국민 차원의 사회적 고통의 발현으로”(79쪽) 세월호 사건을 정면으로 직시해야만 한다. 어느 경우든 참사를 제도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논점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사물화하여 계량적 사고로 치환시킬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남긴 트라우마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를 쓴 김종곤은 세월호가 함축하는 상징적인 상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있다. 처음 배가 가라앉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나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국가의 구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무의식적 희망과 의존심리에 빠져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증상이라 할 만하다. 국가에 대한 이토록 강고한 신뢰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일종의 ‘방관자’ 같은 입장에 방치해 두었고, 3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망연히 지켜보게 만들었다. 조금 과장을 섞어 말한다면, 타인의 죽음을 방조하고 목격하도록 강제당한 것이다.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던 국가는 이 지점에서 “부모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그러한 아버지-국가 가 되었”고, “사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결핍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드

러냈다는 점에서” 세월호는 분명 “사건”이었다(115쪽). 해상조난사고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범죄’로서 세월호의 문제의식을 버려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죽은 자와의 연대가 비단 수사적 구호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죽은 자를 죽지 않도록, 우리 곁에 불리오고 살려내야 한다는 것은 세월호를 국가라는 근대적 상징체계의 몰락, 부재로서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이로써 우리가 새로운 연대와 공동체의 재건에 몰두하도록 독려한다.

3. 국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시민적 실천

이 책의 두 번째 주제는 ‘세월호 이후의 국가’라는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은, 국가의 허구성 또는 무능력의 문제가 세월호를 계기로 우연히 드러난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근대가 발원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기입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에서 최원은 미셸 푸코를 빌어 근대의 권력 유형들을 세밀하게 분류해 설명한다. 우리 시대까지 축수를 뺀 자유주의 권력의 특징은 인구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 ‘비용 계산’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해, 영토국가에서 국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 비용이 있을 때, 얼마의 손해를 감수해야 나머지 인구에 대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지 국가는 항상 계산하고 있다는 말이다. 푸코는 프랑스 역사에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대립을

예거하며 국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이 이런 비용 계산의 차원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헛된 망상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국가는 안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대개 그것이 국민의 안전이라 믿지만, 실상 그것은 국가 권력의 안전이지 국민의 안전이 아니다. 중농주의자들은 곡물가를 자유 화함으로써 생겨나는 빈민과 기아의 문제에 대해 그것이 국민 전체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했다. 누군가 굶어죽어야 나머지 인구가 최소한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국가 전체가 유지된다면 허용할 만하다는 논리다. 근대적 안전 권력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로부터 최원은 세월호의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은 자칫 안전 권력으로서의 근대 국가의 논리에 휘말려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월호를 계기로 여객운수 및 해양안전 등이 강화된다면 국가로서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 셈이므로, 절대 근본적인 반성이나 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비용 계산의 메커니즘으로써 작동하는 국가의 관성을 타파하는 급진적인 운동을 조직하는 데 있다.

현직 교사인 김환희는 「세월호 이후의 교육」에서 그와 같은 운동의 급진성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구어낼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쏟아낸다. 세월호 이후 각급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과 설비개선 및 강화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사실 자체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일상을 열심히 가꾸고 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 물질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에 대한 요건들을 강화하

고 보다 합리적이며 안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아예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없애버리는 조치로 나아간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는 정말 안전에 대한 인식의 증대인가 혹은 교육활동 자체의 포기인가? 김환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하고, 언론의 보도태도나 입장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용되었는지에 대해 꼼꼼한 성찰을 시도한다. 대통령의 책임방기와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인이 보여주는 것, 국정원과 해경, 청해진해운의 책임전가와 회피가 드러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간단명료한 진실이다. 합리성을 가장한 이 사회의 시스템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통절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실상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는” 이 비열한 사회에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홀로 남겨져 죽으리라는 공포”에서 기인하며,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학생에게 ‘국가마저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실체화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증’을 고양시키고, ‘각자도생’이라는 냉혈한들의 전략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214쪽) 준다. 따라서 새로운 운동의 기본 방향은 각자도생에서 야기된 불안을 서로에 대한 진정한 신뢰로 전환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공동체의 비전을 탐색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월호 이전의 여러 해양참사들이 일종의 ‘연대기’를 이루며 존재해왔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로부터 전혀 배움을 얻은 바 없었다. 달리 말하자면, 참사가 일어

났을 때마다 진상을 규명하려고 시도했으나 한 번도 철저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한국사회는 역사적 이행기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문제들을 깨끗하고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그렇게 미완의 문제들이 일정하게 쌓여 폭발해버린 것이 우리가 목도한 참사의 진면목이다. 강성현은 「피해자와 사회 중심의 진상 규명과 정의 수립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불거진 진상 규명의 맹점을 짚어보고, 그 역사와 세월호의 접점을 적극 파헤쳐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냉철하게 지적한다. 관건은 이렇다. 세월호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것을 지켜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을 때 이 문제를 특정한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죽었을 때 보상금을 지불하고, 안정을 빌미로 사건을 서둘러 지워버릴 경우, 즉 ‘진상 규명 없는 보상 모델’에 갇히게 될 경우 우리는 쉽게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망각하게 된다(232쪽 이하). 동일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구조적 발판을 스스로 만들어놓는 것이다. 그러다 역사적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결국 진실과 화해를 이루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첩첩이 쌓이고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가의 힘을 빌리는 일이 잦다. 하지만 국가야말로 진상 규명 없는 보상 모델의 적극적인 창안자이자 이용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진상 규명이란 법적인 절차주의도 아니고, 보상이라는 손익계산의 차원도 아닌, 피해자와 사회를 고려하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 속에 수행되어야 할 시민적 행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4. ‘나쁜’ 국가를 넘어, ‘좋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

마지막 3부는 ‘세월호 이후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다섯 명의 필자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엔 처벌과 배상을 통한 희생자의 위무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분열된 사회의 정치적 재통합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기에 ‘치유’는 그 의미 영역이 대단히 넓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과제를 함축한다. 달리 말해, 세월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개인들을 일상으로 복귀시키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복원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실된 신뢰와 믿음을 향상된 상태로 인도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왕배는 「세월호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에서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연대라는 열쇠어를 통한 사회의 재건에 있다고 역설한다. 널리 회자된 박민규의 글 「눈먼 자들의 국가」는 세월호로 인해 우리가 국가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잃은 것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믿음이다. 근대 사회가 성립하면서, 특히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휘되면서 국가는 이미 국민을 돌보고 구할 이유를 저버린 지 오래다. 근대의 미혹에 사로잡힌 국민들만이 국가에 대한 환상의 끈을 붙잡고 있던 셈이다. 세월호는 이러한 진실을 우리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낸 사건이고, 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은 국가 없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연대의 발명에 있다. 여기서 핵심은 희생자들을 ‘운이 없는 자’ ‘불쌍한 자’ ‘억울한 자’와 같은 수동적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산 자들이 함

께 모이고 힘을 합하여 공동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적극적 사회운동의 참여자로서 주체화하는 데 있다. 죽은 자와 함께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란 바로 이것이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들을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할 객체로만 대한다면 어떠한 사회적 연대도 불가능할 것이다. “동정적·시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집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 연대 차원의 참여와 사회운동이 요청된다. 사회 연대를 통한 참여와 사회운동은 트라우마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고, 문화나 제도를 구축하는 힘을 행사하게 한다. 또한 사회 연대는 트라우마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 회복의 의지를 북돋는 기능도 수행한다”(271쪽).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제도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있다. 「재난 시대의 혐오」라는 글에서 김서경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자연재해와 인재를 구별하지 못한 인식상의 오류에서 기인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통상적으로 가정하듯 정서적 공감은 그저 개인 사이의 감정적 동조에 머무는 현상이 아니다. 다양한 과학적·심리학적 실험들을 예로 들면서 김서경은 인간 정서의 전달과 공감은 논리와 판단이 결합된 결과물이고, 따라서 잘못된 조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로 인간의 정서에 부정적 자극을 가하고, 이 때문에 유가족들의 행보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는 이미 부정적으로 전이된 감정이 배면에 깔려 있게 된다는 말이다(299쪽

이하). 그러므로 유가족들에 대한 그릇된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정적 편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성찰을 전제한 상태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호소하거나 시위에 나서는 등 생존자 및 유가족이 보여주는 여러 사회적 행보가 ‘개인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이기적 행태’가 아니라는 관점을 수용하도록 유도해, 그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바가 물질적 지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보적 지지나 사회 교류적 지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인식할 때 비로소 공동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낼 공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307쪽). 다소 당위적 차원에 머물기 십상인 사회적 지지의 심리학적 기반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득한 유의미한 논문이다.

「인권의 시각에서 본 세월호 사건」을 작성한 이재승은, 그 모든 사회적 치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구해야 할 모두의 과제란 세월호에 대한 범죄적 사실임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기업이 ‘공모’하여 일으킨 ‘국가·기업의 범죄’이며, 어떤 식으로든 책임 문제를 명백히 하여 처벌과 배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법적 사안이다. 특히 구조와 관리의 차원에서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해경과 정부는 국가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나아가 참사가 벌어진 후 교묘한 책임 회피와 언론 통제로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 국가는 반(反)인권적 범죄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사건과 진실,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는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 일반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자. 사태를 풀어갈 주도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360쪽).

박명림은 「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라는 결론적 논문을 통해 이 책에서 개진된 모든 논의들의 귀결점을 간결하게 정리해준다. 그것은 국가를 대신하는 공동체의 문제다. 세월호는 근대 사회가 믿었던 거대한 국가 관료 기구와 조직이 하나의 허상으로서만 존재하며, 거기서 인간은 한낱 부품에 지나지 않기에 타인에 대한 감정과 연대, 책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즉, 우리는 “관료화·기계화·부품화가 초래한 인간들의 판단 능력과 책임 의식의 심각한 증발을 목도”한 것이다(373쪽). 사회계약론은 우리가 자연의 폭력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정치와 사회, 문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를 창건했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세월호는 그것이 다만 신화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했고, 우리는 계약의 첫 장면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무정치, 무사회, 무국가의 원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대로 자연상태의 각자도생에 서둘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인가? 세월호리는 사건을 극복하는 일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른다. 다 잊고 떠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미봉으로 남겨둔 채 이로부터 빠져나오는 일은 언젠가 더욱 커다란 참화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 국가의 부재를 확인하고 사회의 균열을 목도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인간 모두가 지니고 있고, 지닐 수 있는 개별적 문제를 개인들의 인간적 도리와 전체 공동체의 사회적 염치를 결합해 이성과 윤리, 제도와 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바람직한 해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89쪽). 세월호가 진정 일깨워주는 진실은 모든 공동체(국가)가

허구이거나 사악하다는 게 아니라, '나쁜' 공동체를 넘어서 '좋은' 공동체를 재건할 기회와 역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찰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똑같은 오류와 실수를 반복하고, 비극적 사건으로 언제든지 되돌아갈 위험에 처한다.

5. 사회과학 이후의 사회과학을 위하여

근 450쪽에 이르는 두툽한 분량을 자랑하는 이 책은 세월호를 주제로 했던 기존의 담론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가령 인문학적 주제로 세월호와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연구했던 다른 책들이 다소 사변적이고 성찰적인 차원에서 사건의 의미를 되짚고 새로운 공동체를 타진했다면, 이 책은 세월호 '이후'의 여러 사회적 현상들이 지닌 함의를 묻고 그 원인을 해부하며, 실천적 대안을 묻고 응답하는 까닭이다. 혐오와 프레임 정치, 감정의 사회심리학적 특성들, 사법적 문제의식 등이 그 사례들이다.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이라는 열쇠어를 통해 세월호를 규명하려는 이 책의 시도는 세월호를 단지 세월호라는 사건, 곧 2014년 4월 16일의 단발적인 사건으로 묶어두지 않고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모순적 증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해, 세월호는 현대사의 굴곡을 재현하는 사건이며, 그 때문에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문」에서 세월호의 진상 규명 노력이 5·18의 진실 규명 노력과 공명하며, 두 운동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모아

들여지고 있음은 그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다. 광주와 세월호는 서로 다른 별개의 두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민중, 지배에 대한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적 운동이 각인된 한국 현대사의 현장들이었던 것이다. 해가 갈수록,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고 피로에 젖어들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진상 규명과 해결책에 대한 요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달리 있지 않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세월호의 가능성을 고스란히 우리 안에 지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책의 제목을 ‘이후’의 사회과학이라고 붙인 것도 그런 점에서 이해해볼 만하다. 앞서 언급했듯, 근대 사회과학의 이념은 객관성과 가치중립에 있었다. 그것은 지배자의 이해에 봉사하고 현상을 변형시키지 않은 채 관조만 하는 태도를 함축하고 있었다. 세월호 ‘이후’, 어쩌면 이미 광주 ‘이후’부터 비롯되었던 사회과학의 변형은 그러한 근대적 학문의 망상을 떨쳐내고, 고통 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자체의 한계를 돌파하여, 진정 ‘사회’의 ‘과학’으로서 가동될 것이다.

서지